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21. 12.



대전광역시의회

제 출 문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최 인 혜



대전광역시의회 「조례 재정비 연구회」 참여의원



대표의원 박혜련



참여의원 김인식



참여의원 남진근



참여의원 민태원



참여의원 박수빈



참여의원 손희역



참여의원 우애자



참여의원 이광복



참여의원 이종호

목 차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I 연구 개요	1p.
II 연구 추진 방향	3p.
III 연구의 세부 추진내용	5p.
IV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7p.
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8p.
VI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14p.
VII 대전시 위탁 관계조례 문제점(총괄)	27p.
VIII 대전시 위탁 관계조례 유형별 문제사례	31p.
IX 대전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41p.
X 대전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49p.
XI 대전시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287p.

I

연구 개요

□ 연구명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행정의 비효율·비대화를 방지하고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
로 행정사무의 위탁 논의가 확산
- 1998년 「지방자치법」에 공공부문 및 법인·단체·기관·개인 등 민
간부문에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당시 집행적 성격의 사무가 다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구조조
정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에 대폭 위탁
- 그러나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
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 문제 표출
- 이는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는 동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대국민 신뢰 추락으로 귀결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행정의 근간인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재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Quality)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관계조례의 발굴·검토
- 법령과 충돌하는 조례 내지는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입법의회로서의 기능 강화 및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 나아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법치 행정을 기함

- 법령으로 정한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행정권한·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

➔ 위임·위탁 등의 방법으로 행정권한의 주체를 바꾸려면(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 현재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 중인 사무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검토해 법적근거, 수탁대상기관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
- 법령에 위배되는 위탁 관계조례를 전수 조사한 후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 연구의 수행 기간

- 2021. 9. 16. ~ 2021. 12. 14.(3개월)

Ⅱ

연구 추진 방향

□ 연구 수행방법

-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발굴
- 위탁 관계조례를 유형별로 추출·검토
- 우선적 정비 대상 위탁 관계조례 발굴 후 합리적 개선방향 제시

□ 연구 수행의 법적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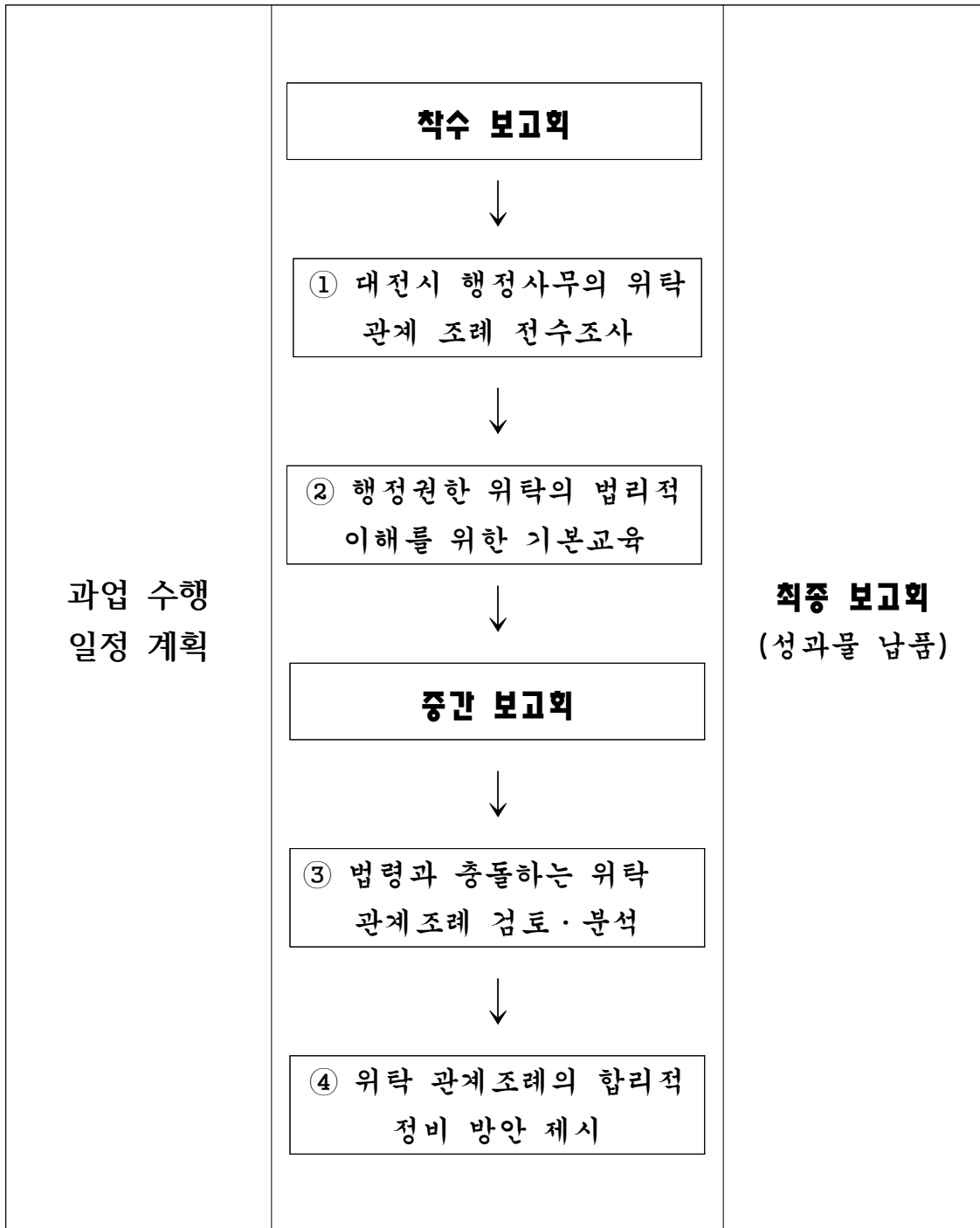
- 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
- 사법부(법원) 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 기타 정부부처 고시·지침 등

□ 기 타

- 위탁 관계조례(기본조례+개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 위탁 관계조례가 개별법상 위탁 근거와의 일치 여부
- 위탁 관계조례가 법상 위탁 범위와의 일치 여부

□ 연구 수행 절차도

본 과업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고, 단계별로 과업수행의 일관성 유지 및 법령 적합성 확보에 중점을 둠



Ⅲ

연구의 세부 추진내용

□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현행 위탁 관계조례를 체계적·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문제점, 미비점 등 보완사항 도출
- 위탁 대상사무의 법적근거 및 법정 수탁기관 적격성 여부 등 심층적으로 분석해 위탁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할 위임 규정의 누락 여부 점검
-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는 권리의 제한 내지는 의무의 부과, 규제사항 여부 점검
-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자격, 계약기간, 그 밖의 조건사항 누락 여부 등 점검

□ 위탁 관계조례 중 발굴·검토 사항

- 위탁 관계조례의 법적근거·법적지위 등 문제점 도출
- 위탁 대상사무의 문제점 및 입법미비 사항 도출
- 위탁 관계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충돌하는 규정 발굴·검토

☐ 위탁 관계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 검토

-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 위법하거나 또는 실효성 없는 위탁 관계조례 규정들을 점검하여
일제정비를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용어 선택의 적정성 여부
-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기, 누락사항 등 점검

☐ 위탁 관계조례의 정비방안 제시

- 위탁 관계조례의 재정비 방향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 조례
재정비 방안 제시
- 위탁 관계조례의 재정비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일정 등
제시

IV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 연구 인력 및 약력

연구자	책임 구분	현직 및 주요 경력
최인혜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 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
배석주	[공동연구원] 정비 대상 조례 발굴 · 검토 및 정보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외대 외래교수 · (전) 조순형 국회의원 보좌관

■ 과업 분담 내역

직책	성명	업무 분장 내역
연구책임자	최인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프로젝트 진행 총괄
공동연구원	배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및 검토 · 판례 및 기관 의견 등 취합 · 문헌 정보 조사 등

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기능임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근거, 입법 한계,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헌법」

제117조 ①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고유사무라 고도 함)를 처리할 수 있는 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도 함께 수행
- ☐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 ☐ 주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 조직과 운영, 규모의 합리화·적정성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의무 등

□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특히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의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원칙임

다.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의미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함

□ 위임사무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상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 하에 처리되며 취급과 집행에 있어서 고유사무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사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위임
근거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으로 정한 사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경비 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사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	전액 국비 보조로써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법령 규정 형식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치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법령상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지자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 “~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규정 외에 법령에 “시·도 또는 시·군·구는 ~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법령에 “○○장관은 ○○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에 “~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제한적) 적극 감독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지방의회 의 관여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외에는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음

VI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행정권한 법정주의(行政權限 法定主義)】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그 권한을 변경하는 위임·위탁 시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10.31. 결정 2001헌라1),
- ➔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 ➔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가능하다(법제처-의견제시 사례).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 ☐ 사회복지 등 대주민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 이러한 공무원 조직과 정원,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 등을 최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행정사무의 위탁이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이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전단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후단의 (개별)법령으로 정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대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다.

-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에 관한 고유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의 범위

-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별 예시】

- 조사업무 :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업무 : 특정물질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 관리업무 : 도시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기초시설 등
 1.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 기능
주차장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건설 안전시험, 교량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조경관리, 통신 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 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 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 (200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 편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는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단순사무’ 또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및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등이 위탁의 대상이다.

【법령상 비권력적 사무와 규제사무의 정의】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가 대상임
-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 등을 요하는 사무나 또는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권력적 행정 및 규제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함

가. 법령상 민간위탁의 정의(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

나. 법령상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허가·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공장허가, 요식업 허가 등)
 - 그밖에 지방세 징수, 법정 부담금, 주·정차 단속 등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 등

2. 공공위탁

가. 공공위탁의 개념

-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제151조)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공위탁의 범위

-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공단체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대상기관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104조 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제151조), 그 밖에 공공기관 등으로서 법적지위가 공공부문이므로 ‘공공위탁’이라 한다.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출자·출연 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공공부문의 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지칭하고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15)
-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예산 지원 및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지원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체육회, 문화원 등 공법인이 해당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권한과 책무가 따른다.

- 공공위탁의 수탁대상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선정·공모에 참여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되겠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정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또한, ‘그 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5-11-10)

3. 관리위탁

가. 관리위탁의 개념

-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 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 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 법상 유사 개념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흔히 임대라고도 한다. 주로 식당, 카페, 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이며,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 관리방법, 수입·지출비용 등을 산출하여 그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상계의 개념이다.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관리위탁의 범위

☐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재산이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수탁기관이 하는 행위의 법적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

☐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_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다. 행정사무 위탁의 특례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며, 법상 수탁대상기관은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참여가 가능
- 행정사무 위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
 -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행정안전부_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우선적으로 적용

【관리위탁 대상시설 유형별 예시】

1. 비교적 단순 서비스 관리 시설
환승주차장 및 견인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관광지 및 유적지 관리, 장묘시설(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2.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등

종합운동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등

4.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5.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등 도시철도시설, 산업단지 시설 등

VII 대전시 위탁 관계조례 문제점(총괄)

구 분	문 제 점	개선 방안
1.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공공단체) . (공공기관)	<p>□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보면 “대전광역시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p> <p>□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 민간위탁의 절차·방법 등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공공부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적 기본 조례 미제정</p> <p>□ 현행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공공부문 위탁기관의 참여를 제한</p> <p>□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의 미제정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사무 및 절차상 하자 발생,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의결권·동의권) 침해 우려</p>	<p>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 명문화</p> <p>↓</p> <p>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을 통합하는 기본조례로 운용</p>
2.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p>□ 사무의 위탁 시,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법」의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해야 함</p> <p>□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절차·방법 등을 준용해야 함에도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령 불부합</p> <p>□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므로, 단순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적용 불가</p>	<p>관리위탁 대상사무의 절차적 기본조례 제정·검토</p>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법제처)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안전번호 : 의견 2017-0103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여부

2.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해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참조),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하되, 수임 또는 수탁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되, 수탁자의 범위를 제2항보다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있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장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그 사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VIII

대전시 위탁 관계조례 유형별 문제사례

□ 사무의 위탁 제도 운영상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제도의 개념 정의 및 이해 부족
 - ➔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혼용으로 절차상 하자가 우려되므로 법정 위탁의 개념 구분 필요
- ◎ 위탁 구분과 관련해 체계적 연구 및 매뉴얼 미흡으로 법령과 불부합
 - ➔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의 혼용으로 개념 구분이 필요
- ◎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임의 위탁 남발
 - ➔ 사무의 위탁 시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탁하는 등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교육 필요
- ◎ 사무의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해 절차적 민주성 결여
 - ➔ 위탁사무가 법적근거를 달리 함에도 민간위탁만 적용하여 법령과 불부합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법적 근거】

법령 구분	법정 수탁대상기관	근거 조문	조례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 공공단체·공공기관	제10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제151조	
	·민간위탁 →법인·단체 그 기관, 개인	제104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제27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반재산 위탁관리 → 특별법상 법인	제4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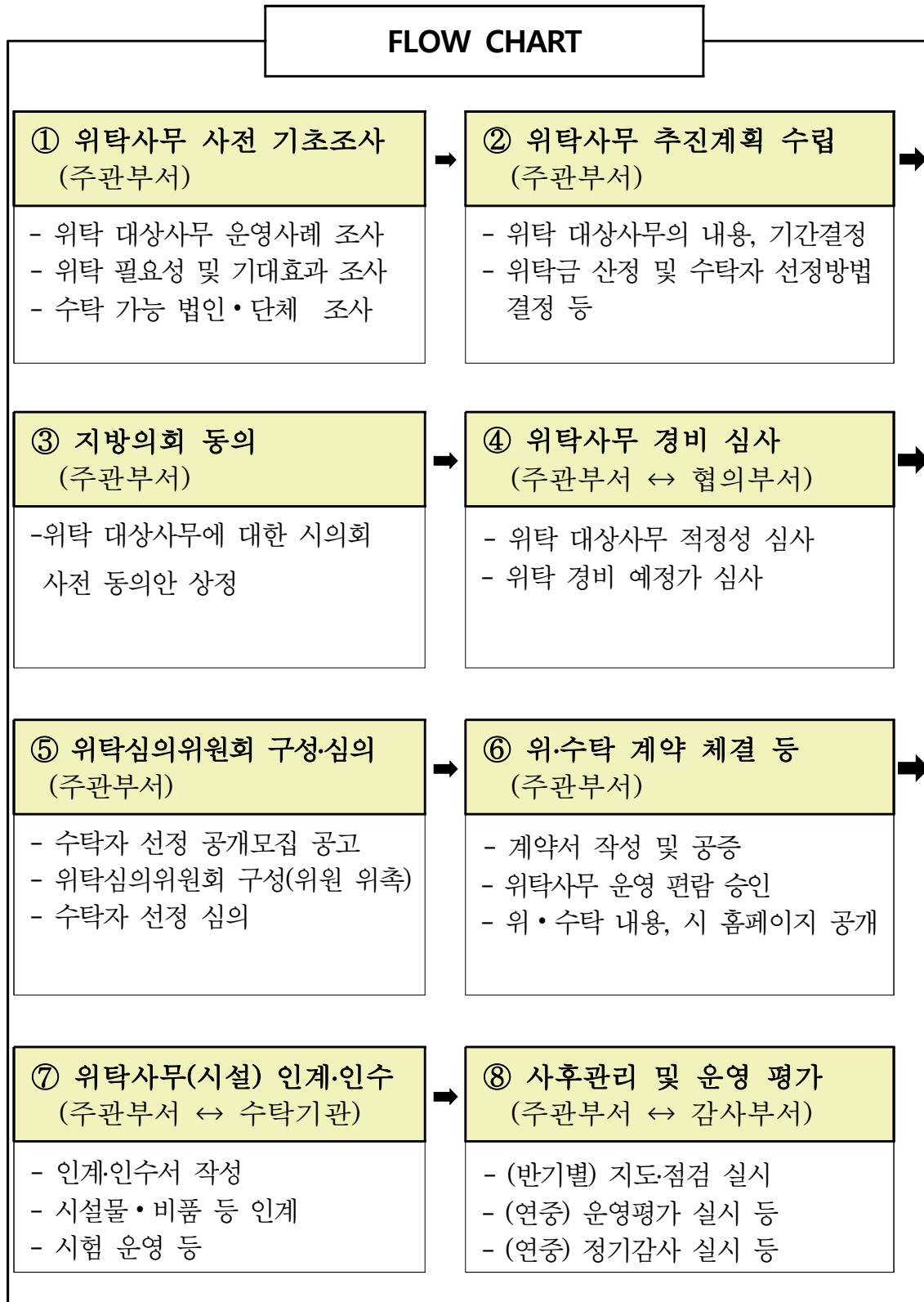
□ 사무 위탁의 제도개선 사항 요약

구분	현행	개선안
위탁 대상사무의 성질 구분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 위탁·위탁관리 혼용	법정 위탁 개념 구분 필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 혼용	유사 개념과의 구분 필요
위탁 시 적정성 판단 기준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모호	명확한 적정성 판단 기준 제시
위탁사무의 법적근거 제시	사무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적 사항 미리 제시
자치사무만 위탁 동의	사무 위탁 시 자치사무만 의회 동의를 받고 단체위임 사무는 모두 배제	위탁의 법률상 효력은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 모두 동일하므로 준용
심의 위원회 적용 근거	사무 위탁 시 「민간위탁 조 례」의 심의위원회가 수탁기 관을 선정해 법정위원회가 모두 배제	법정위원회 및 임의위원회의 개념과 상관관계 제시로 합법성 도모
재계약(수의계약) 시 위원회 사전 평가·심의	재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적 인 법적 기준이 모호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평가에 따른 자격(법적 지 위) 명확화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하여 공공 부문은 모두 배제	사무 위탁 시 민간의 법 인·단체, 개인에게만 적용 하므로 공공부문이 모두 배 제되므로 법령 위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 합하는 사무 위탁의 기본조 례를 제정하여 법령 적합성 유지
행정재산의 위탁 조례 미제정 · 입법 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 리·운영에 따른 위탁 조례 와 매뉴얼 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 탁에 따른 제도 정비로 위 탁사무의 합법성 유지

□ 사무의 위탁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사 개념	내 용	근거법령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공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1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대행	1. 권한대행 ;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제111조
	2. 업무대행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교부	「지방재정법」 제2장의2

□ 사무의 위탁 절차도



【사례 1】 조례상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등 다수의 조례에서 수탁대상기관을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 불부합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6조(위탁 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례 2】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다수의 조례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여 법령 불부합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례 3】 조례에 법정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 법령 불부합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등 다수의 조례에서 법정 심의위원회 미구성으로 법령 불부합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영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2.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IX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 대전광역시 위탁 관계조례 현황

(2021년 9월 현재)

[총 17개부서] - 담당관 - 실·국 - 사업소	위탁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개
	위탁 개별조례	250개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100개

■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현황(100개)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1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청탁금지법	국가	×	
2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공공·민간
3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지방공무원법	위임	○	공공·민간
4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위임	○	공공·민간
6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	
7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국제회의법	위임	×	
8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국제회의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9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여성폭력방지법	위임	×	
10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	
1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재난안전법	위임	×	
12	대전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세월호피해지원 법	위임	×	
13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	공공·민간
1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노사관계발전법	위임	×	
1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	공공·민간
16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고용정책 기본법	위임	○	공공·민간
1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판로지원법	위임	×	
18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전통시장법	위임	○	공공·민간
1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보호법	위임	×	
20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물환경보전법	위임	○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2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산업집적법	위임	○	공공·민간
22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공공·민간
23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	
24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항공안전법	국가	×	
2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위임	×	
26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산업디자인 진흥법	위임	○	공공
27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스마트도시법	위임	○	공공·민간
28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공공·민간
2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 협력법	위임	×	
3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지방재정법	위임	×	
3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재외공관 설치법	위임	×	
3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지방공무원법	위임	×	
3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지방세기본법	위임	○	공공
3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법	위임	○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35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법	위임	×	
3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본법	위임	×	
37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산물직거래법	위임	×	
38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예술인 복지법	위임	×	
39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독서문화진흥법	위임	×	
40	대전광역시 국어 진흥조례	국어기본법	위임	×	
41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42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문학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43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서예진흥법	위임	×	
44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4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체육시설법	위임	○	민간
46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47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무형문화재법	위임	×	
48	대전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관광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49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문화산업법	위임	×	
50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문화산업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51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출판법	위임	×	
52	대전보훈공원 관리 조례	국가보훈 기본법	위임	○	공공·민간
53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5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사회복지사법	위임	×	
5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조례	사회복지 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5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노인복지법	위임	○	공공·민간
57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고독사예방법	위임	×	
58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장사법	위임	○	공공·민간
59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고령친화산업법	위임	×	
6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61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장애인보조 기기법	위임	○	공공·민간
62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63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64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65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정신건강복지법	위임	○	공공·민간
66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모자보건법	위임	×	
67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신건강복지법	위임	○	공공·민간
68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치매관리법	위임	○	공공·민간
69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	
70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감염병예방법	위임	×	
71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영유아보육법	위임	○	공공·민간
72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위임	○	공공·민간
73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7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아동학대처벌법	위임	×	
75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학교폭력예방법	위임	×	
76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청소년활동법	위임	○	공공·민간
7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학교밖청소년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78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소년기본법	위임	×	
79	대전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환경교육 진흥법	위임	×	
80	대전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	
81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수도법	위임	×	
82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목재이용법	위임	○	공공·민간
8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도시공원법	위임	×	
84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위임	○	공공·민간
8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폐기물시설 촉진법	위임	×	
8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교통약자법	위임	×	
87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 조례	지방공기업법	위임	○	공공
88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여객자동차법	위임	×	
89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	위임	×	
90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법	위임	○	공공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9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법	위임	×	
9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도시재정비법	위임	×	
9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정비법	위임	×	
9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법	위임	○	공공 · 민간
95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수도법	위임	○	공공 · 민간
96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수도법	위임	×	
97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박물관미술관법	위임	×	
98	대전예술의전당 관리 ·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 · 민간
99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수목원정원법	위임	×	
10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 ·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 · 민간



대전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1.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운동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청탁금지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

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부정청탁금지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책무만 규정할 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개별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 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탁금지법	국가	×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2.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말한다.

제8조(위탁)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계약법」 등 법령과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공공·민간

3.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 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무원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공공·민간

4.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대전세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 ② 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평가) ②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탁 대상별로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_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검토 의견 : 사무 위탁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정된 위탁의 기본조례가 민간부문에만 적용할 뿐, 공공부문 위탁 조례는 없으므로 민간과 공공위탁을 통합 운영하도록 위탁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위임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공 · 민간

6.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7.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제·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제회의법	위임	×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8.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전광역시 출연금
2. 정부 또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해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제회의법	위임	×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9.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8.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

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 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여성폭력방지법	위임	×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10.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2.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3.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제13조(성인지 교육내용 및 방법 등)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1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2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크,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나. 사회재난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재난안전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2.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운영
2.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
3.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교육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세월호 진상 규명법」, 「세월호피해지원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세월호피해 지원법	위임	×	대전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13.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문화·체육사업
2. 근로자 직업안정,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10조(위탁)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복지회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공공·민간

1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4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제5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노사관계 발전법	위임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1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의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근로자
4. 그 밖에 근로조건이나 고용계약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근로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3. 근로자 교육사업
4.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권익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	공공·민간

16.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

나.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촉진 지원

제14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취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직업훈련 등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4. 그 밖에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고용정책 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공공·민간

1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사업
 5. 대전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
 6. 지역 기업의 신상품 판로지원 사업
 7. 지역 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지원
 8.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4조(구매 중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판로지원법	위임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18.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4.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6.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시장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주차장 및 안전시설물 점검 업무는 위탁의 근거가 있음
- 시설물 관리는 위탁이 아닌, 관리자 지정 방식이어서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 주차장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전통시장법	위임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공공·민간

1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 창업상담·경영컨설팅·홍보 마케팅 등 지원
3. 주문, 배달 및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4.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5.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8. 도시형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9.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법」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소상공인보호법	위임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5. 삭제 <2019. 10. 15.>
-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물환경보전법	위임	○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공공·민간

2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산업단지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산업집적법	위임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공공 · 민간

22.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 체험 및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대전시민천문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시민천문대(이하 “천문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213-48(신성동)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수탁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전문대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23.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법인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
2.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조사 및 분석
3.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
4.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연구개발 사업화 기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진흥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관리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4.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무인항공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산업”이란 무인항공기를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항공기 창업 및 경영지원
 4. 무인항공기 전문인력 양성
 5.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항공기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7. 무인항공기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항공안전법	국가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 제조·개발 및 성능향상에 관련된 산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

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

3. 창업, 경영,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4. 인력 양성

5. 뷰티산업 실태조사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화장품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위임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26.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대전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성별, 연령, 신체능력, 국적 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 사업
3.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지방출자출연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나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디자인 사업은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기본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산업디자인 진흥법	위임	○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

27.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와 대전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4조(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를 설치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 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반시설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그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스마트도시법	위임	○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28.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은 효율적인 대전 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사업
2. 시의 경제 활성화 사업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4.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기 사업
5.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제6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2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남북교류 협력법	위임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재정법	위임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3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 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재외공관 설치법	위임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 구내식당 · 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 상담실 · 심신안정실 · 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5. 국외 정책 연수
6.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7.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 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9.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0. 중증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11.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 · 문화행사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무원법	위임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3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대전광역시 관할 외의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소속기관장 포함)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세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공공

3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제5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 장은 임기 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에서 위탁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본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원봉사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공·민간

35.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체계적인 관리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

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적기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9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융자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협동조합등의 인프라 구축지원
5.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6.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설립 상담 및 컨설팅, 교육, 홍보, 인프라 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모델개발 및 대전광역시정책연구지원
3. 협동조합 조직간의 협력지원
4. 협동조합 조직 및 지원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담, 교육, 홍보, 창업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원활동
6. 그 밖에 협동조합 발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 장려를 위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협동조합 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37.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대전광역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 중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상호 간 신뢰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식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 나.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 다.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 마. 로컬푸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 가.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등 관계자 교육
- 나. 로컬푸드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약 등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 가. 여성·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보존 및 생산관련 사업
- 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로컬푸드 생산 관련 사업
- 마. 로컬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유통 등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및 유통업종사자 교육
 3. 로컬푸드 관련 연구 개발 및 경영 컨설팅
 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 및 직거래 등 연결사업
 5. 로컬푸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판매촉진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법인

나. 관련 법령 : 「농산물 직거래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 기관(이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해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홍보·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농산물직거래법	위임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38.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예술인 복지법	위임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39.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 매장 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독서문화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40. 「대전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3조(실태 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어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국어 진흥조례	

41.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창작스튜디오
4. 체험실
5. 법인·단체 사무실
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운영 관리) ① 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예술가의 집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공공·민간

42.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제2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은 「문학진흥법」(이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대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의 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표 문학관으로 대전문학관(“문학관”)을 설치·운영한다.

③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업
2. 문학창작활동 지원 사업
3. 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나. 관련 법령 : 「문학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문학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공공·민간

43.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사업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사업
3. 시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

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서예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44.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6. 작품 반출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미술관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미술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 조례	공공·민간

4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위탁 운영 관리)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체육시설법	위임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민간

46.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이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50(송촌동)
2.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문지동)
3. 대전전통나래관 : 대전광역시 동구 철갑2길 2(소제동)

제4조(운영) 시설은 대전광역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무형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화 보급 · 전수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5. 문화 보급 ·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위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전수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47.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정기조사) ①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예능, 전수교육 및 전승 활동 실태
2. 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기·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황, 전승활동 실태
3.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황

② 시장은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⑤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학교 등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나. 관련 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무형문화재법	위임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48. 「대전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관광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공공·민간

49.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개발·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등과 관련된 산업

나.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연품과 관련된 산업

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립·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전통의상·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9.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10.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

제5조(제작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영화와 지상파, CATV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내 촬영 영상물의 제작비용 일부를 지역의 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사무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 지원)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 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산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50.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기획 및 제작, 유통, 상영 지원
2.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3. 영상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전국적 규모 행사
5. 영상산업 관련 기업·단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5조(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 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산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51.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추진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추진) ①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법」, 「출판법」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4조(조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시행일 2022. 2. 11.]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 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출판법	위임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52. 「대전보훈공원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보훈공원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보훈공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로 46(사정동) 일원에 소재한 영렬탑,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 공훈선양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은 대전보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렬탑 및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2. 6·25전쟁 유물 등 전시품의 수집 및 전시
3.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 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등(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보훈공원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가보훈기본법	위임	○	대전보훈공원 관리 조례	공공·민간

53.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54(흑석동)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 사업
2.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

제12조(위탁 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심의위원회 미설치 등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 복지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기성종합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5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법	위임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5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조례」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태미로 26(대흥동)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3. 소득보장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위탁 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심의위원회 미설치 등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 복지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조례	공공·민간

5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위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의 수탁기관 및 개별조례가 심의위원회 미설치로 법령 불부합
- 지원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노인복지법	위임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공공·민간

57.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방문간호 서비스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4.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5.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고독사예방법	위임	×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58.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장사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사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공공·민간

59.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지방자치단체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고령친화산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6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탁 운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의 수탁기관 및 개별조례의 심의위원회 미설치로 법령 불부합
- 복지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공공·민간

61.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 정한 장애인보조기구를 말한다.

제4조(보조기구센터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기구 수리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구 서비스
2. 전시장 운영
3. 보조기구 전문인력 교육
4. 보조기구 정보 제공 및 홍보
5. 보조기구 관련 연구 및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구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대상기관, 심의위원회 등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보조기기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공공·민간

62.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이하 “주민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6(산성동)에 둔다.

제3조(업무) 주민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사업
2.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주민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 및 심의위원회 미설치하여 법령 불부합
- 복지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공공·민간

63.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강카페”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청사 또는 사업소 내에 건강카페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빵 등의 판매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한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②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시 또는 사업소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위탁 시마다 시 또는 사업소별로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수탁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 : 보건복지국장
2. 시 사업소 : 사업소의 장

나.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4.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2.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물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 및 기본조례의 심의위원회,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5.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대전광역시립(이하 “시장”)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21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개별조례에 심의위원회 미설치로 법령 불부합
- 시립병원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정신건강복지법	위임	○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공공 · 민간

66.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방난임치료”란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등 한방의료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근거는 있으나, 개별조례에서 정한 난임 지원사업은 위탁의 근거가 없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모자보건법	위임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67.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사업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정신건강사업의 연구·자문·기획·평가 수행
3.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가족, 유관기관 등 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
4.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업무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령, 성별 등 현황분석·통계 데이터 구축
7.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정신건강복지법	위임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공공·민간

68.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에 따른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4.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5. 전문가양성 및 교육·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관련 법령 : 「치매관리법」, 「의료법」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치매관리법	위임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공공·민간

69.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6조(평가 및 연구 지원)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절주 및 금주 조사·연구하는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및 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권한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70.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다.

제4조(감염병관리지원단)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
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
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⑦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감염병예방법	위임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71.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가족돌봄과장이 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나.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

·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 자격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어린이집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영유아보육법	위임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공공·민간

72.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령”)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가족돌봄과장이 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등 법령 불부합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영유아보육법	위임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공공·민간

73.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둔다.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 시설 운영
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 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범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 등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7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체계 구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 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아동학대처벌법	위임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75.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학교폭력예방법	위임	×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76.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과 더불어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 나. 청소년수련원
- 다. 청소년문화의 집
- 라. 청소년특화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 바.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
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단체의 정의」

[여성가족부_고시, 2005. 4. 8.]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
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수련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청소년활동법	위임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공공·민간

7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2. 자립지원 사업
 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청소년기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학교밖청소년법	위임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78.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다른 시·도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위임	×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79. 「대전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관련 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환경교육 진흥법	위임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80. 「대전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계의 변화 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도래지
3.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지·도래지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와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및 대행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81.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위탁 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나.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하수도법	위임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82.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무상상놀이터
2. 전시실
3. 목공체험실
4. 영상실
5. 숲향기방
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관련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의 수탁기관, 개별조례의 심의위원회 등이 법령 불부합
- 목재체험장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목재이용법	위임	○	대전광역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공공·민간

8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설치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제10조(공원 이용 프로그램) ① 시장은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공원 안내자 양성 등 공원 이용 프로그램
2. 공원 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①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는 법 제20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공원시설은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도시공원법	위임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84.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광역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위탁)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포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대상기관, 심의위원회 등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폐기물관리법	위임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공공·민간

8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4.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5.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5조(시설 부지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해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이주 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폐기물시설 촉진법	위임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8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교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접근 편의 제공 및 유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교통사업자 교육은 위탁 근거가 있으나, 센터 및 실태조사는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교통약자법	위임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87.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 시내버스 기·종점지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 마을버스의 기·종점지로서 시장이 설치한 기·종점지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검토 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개별)법령에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과 위탁 대상사무가 정해진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이 가능
- 수탁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인 경우 위탁 및 대행이 가능하나, 사법인은 불가하므로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기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 조례	공공

88.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제3조(재정보조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보조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사업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법」, 「대중교통법」, 「간선급행버스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여객자동차법	위임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89.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2조(용자의 방법)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대상, 용자총액,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자여부를 결정하고 용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용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위탁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

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주차장 특별회계 용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주차장법	위임	×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90.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은 시민의 타슈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시설물 관련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에 타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비용지원, 지휘·감독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자전거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 및 「지방공기업법」 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기업법	위임	○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공공

9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 군의 군수 제외)를 말한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

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도시재생법	위임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원) ① 영 제22조 단서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9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6조 (특별회계의 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용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④ 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도시재정비법	위임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9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공사등과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시행한다.

나.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도시정비법	위임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9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준용) 시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다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_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란, 위탁사무가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이 혼용된 경우에 「공유재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위탁의 특례 규정임
- 관리위탁 개별조례가 위탁의 근거 및 절차·방법 등이 입법미비로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공유재산법	위임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공·민간

95.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 위탁)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수도법」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마을상수도) ①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 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 및 심의위원회 등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수도법	위임	○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공공·민간

9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7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5조(납부 고지) ① 상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해당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제38조(공급 규정) ① 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 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수도법	위임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97.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제7조(매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① 관장은 미술관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 판매 조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나.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박물관미술관법	위임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98.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구분) 전당의 시설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아트홀, 앙상블홀, 컨벤션홀, 원형극장, 야외광장, 공연지원시설, 자료실, 관리시설, 주차시설, 옥외시설 등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 음향, 효과, 무대, 자막기, 냉·난방, 동시 통역 시설 등
3. 기타설비 : 방송촬영, 악기, 현판, 현수막, 비디오 촬영, 귀빈실 등

제14조(입장권의 매·수표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

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 및 심의위원회가 법령 불부합
- 전당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공공·민간

99.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소재한 둔산대공원 안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수목원시설의 위탁 관리) 원장은 수목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수목원정원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④ 국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권한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수목원정원법	위임	×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0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제3조(시설 구분) 국악원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큰마당, 작은마당), 분장실
2. 부대설비 : 영상, 음향, 조명, 무대기계, 무대장치, 악기, 소품 등의 설비와 냉방·난방시설

제25조(위탁 운영) 원장은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등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공공·민간

XI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가. 사무의 위탁 통합 조례(안)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함

나. 근거 법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제2항·제3항, 제151조

다.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위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위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p> <p>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p>	<p>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위탁·재계약 또한 같다.</p> <p>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위탁 대상사무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3.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조문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조문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조문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신설”	<p>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p>제7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신설”	<p>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시장은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위탁 동의안)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좌동”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p> <p>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p> <p>5.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후생복지 수준</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전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조문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조문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조문 이동</p> <p>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대전</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p>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30조에 따른 성과 평가 및 제33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재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이의 신청 등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2. 대전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p> <p>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6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p>	<p>2. 시 4급 이상 관계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5. 그 밖에 해당 위탁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위탁 경비 등 적정성 여부 4.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적격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제6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신설”	<p>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p>제6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6조의7(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p>	<p>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p>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제6조의8(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사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p>“삭제”</p> <p>조문 이동</p> <p>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p> <p>제2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p> <p>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p> <p>제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p> <p>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p>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3조(위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법령, 조례 및 계약서를 준수하고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제2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p> <p>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p> <p>제25조(계약 체결) ① 시장은 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 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신설”</p> <p>제9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개선 노력</p> <p>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9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7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신설”</p> <p>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p> <p>④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p>	<p>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은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삭제”</p> <p>② 시장은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p> <p>③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0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p>	<p>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0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1조(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2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외에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p>	<p>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시장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3조(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p>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시장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 시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p>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5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전문)

「대전광역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위탁 대상사무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탁 동의안)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후생복지 수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30조에 따른 성과 평가 및 제33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재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이의 신청 등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4급 이상 관계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해당 위탁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위탁 경비 등 적정성 여부
4.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적격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법령, 조례 및 계약서를 준수하고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5조(계약 체결) ① 시장은 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탁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9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시장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시장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